

光日春秋



최훈 강원대 삼척지유전공학부 교수

세해 들어 한국 방송에서 '더 로직'이라는 예능 형식의 토론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논리학자로서 반가운 마음에 시청하다가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은 치안 특별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라는 논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인권 차원에서 '까임 방지권'이 있는 외국인을 '감히' 논제로 삼았기 때문은 아니다. 특정 주제를 토론으로 삼지 말자는 것은 민주적인 토론의 정신에 어긋난다. 그보다 이 논제는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은 치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데, 막상 그 전제는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위 논제를 제시하면서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 중 일부 지역에서는 언어, 문화 차이,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한 불안감이 정말로 있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거가 있는가?

'외국인 밀집 지역' 토론에 없었던 것

복합 질문의 오류라는 게 있다. 논리학 교과서에는 "너는 아직도 마누라를 때리니?"가 대표적 예로 실린다. 이 질문에 "응."이라 대답하면 예전에도 지금도 마누라를 때린다는 것을 인정한다. "아니."라고 대답해도 예전에는 때렸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 질문은 "너는 예전에 마누라를 때렸니?"라는 질문과 "너는 지금도 마누라를 때리니?"라는 두 질문이 복합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질문한 오류이다.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은 치안 특별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라는 논제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은 치안 불안감이 있다는 논제와 그래서 치안 특별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제가 복합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 논제를 가지고 토론하면 찬성을 해도 반대를 해도 외국인 밀집 지역의 치안 불안감을 인정하게 된다. 찬성을 하면 당연히 그렇고, 반대를 해도 치안 특별 지역에만 반대한 것이지 외국인의 치안 불안감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작 물어야 할 핵심 질문인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이 실제로 다른 지역보다 치안이 불안한가?"는 건너뛰어 버린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의 범죄율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방송에서 이런 통계를 반대쪽 토론자들이 지적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위 논제가 프레임이 되는 순간 통계는 무의미해진다. '외국인=치안 위협'이라는 연결 자체가 기정사실화되고 토론 자체

가 그 편견을 반복 재생산하는 장치가 되어 버린다. 외국인 밀집 지역을 '문제 지역'으로 낙인찍는 이 방식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온 지역감정이 특정 지역을 프레임에 가두는 지역 혐오와 정확히 같은 구조다.

치안 불안감은 정말로 치안이 나쁘지 않더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공영 방송이라면 그 불안감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혐오에 의해 생긴 것인지 분석해야 한다. 정당한 토론이라면 실체가 있음을 증명할 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에 있다.

더 나아가 설명 범죄율이 정말 높더라도 그것이 외국인 때문인지, 원래부터 범죄율이 높은 동네였기 때문인지, 사회·경제적 요인은 무엇인지 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유도 심문처럼 교묘하게 숨기고 논제로 삼는 것은 토론으로서도 방송으로서도 공정하지 않다.

예능 프로일 뿐인데, 웃자고 하는 말에 죽자고 덤벼 든다고 말할지 모른다. 오히려 예능 형식의 방송이라는 게 더 문제다. 이런 구조적 편견이 '재미있는 토론'으로 포장되어 대중에게 소비되면 그 효과가 무시 못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능은 논리보다 재미와 감동을 우선시하고 시청자들은 비판적 거리를 두지 않고 소비하기 쉽다. 무겁지 않은 포맷 속에서 편견은 더 자연스럽고, 더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종교칼럼

판단과 식별의 기준 '경청'



황성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는 때 순간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어떤 이가 선인이고 악인인지,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이 올바른지 자문한다. 이러한 질문은 타인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 가 아니라 나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 나의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 없으며 때로는 치명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겸허한 성찰만이 우리를 진실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지는 20절 이하의 말씀은 더욱 구체적이고 단호하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분,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왜 이토록 수많은 악한 것들이 외부의 유혹이 아닌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가. 인간의 마음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 판단하고 작용하기에 이토록 쉽게 더러워지는가. 그 해답의 열쇠는 예수의 첫 마디인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에 함축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傾聽)'이라는 거룩한 초대 를 건네신다. 이 경청이야말로 세상을 올바르게 식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경청은 수동적인 침묵이 아니라 지극히 능동적인 영적 투쟁이다. 그것은 시대의 역사적 흐름과 교회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가장 낮고 외진 곳에서 신음하는 약자들의 소리 없는 절규에 응답하는 실천이다. 경청이란 인간의 진정한 결핍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억압받는 이들의 외침 속에서 살아가신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진정한 경청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단이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랑과 봉사 나아가 자발적 희생을 기꺼이 수용하는 용기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삶의 근간이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선

사하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다.

우리가 경청의 가치를 상실할 때 내면은 곧바로 황폐해진다. 타자의 고통에 눈감고 세상의 아픔에 무관심해지는 순간 우리 안에서는 '나쁜 생각'들이 고개를 든다. 부정확한 방식의 한탕주의, 무한한 욕망의 사슬에 묶인 자본주의적 노예화는 우리가 경청하기를 멈춘 지점에서 시작된다. 내면의 소리에만 매몰되어 타인의 존재를 지워버릴 때 인간은 식별의 능력을 잃고 탐욕의 포로가 된다. 식별을 가능하게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힘은 결국 '경청'에서 나온다.

공감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인지적 시도라면 경청은 이해의 여부를 초월하여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한 인격이 실제로 내 앞에 현존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는 태도다.

이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자 하는 존중이며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 쌓아올린 견고한 고정관념을 뛰어넘게 하는 해방의 동력이다. 경청은 단지 조용히 듣는 행위를 넘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실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의 진실에 온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 내면의 판단 작용은 정화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가두는 온갖 탐욕에서 벗어나 사회에 기여하고 생명을 살리는 올바른 식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듣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은 자만이 비로소 올바르게 식별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험란한 말의 잔치가 아니라 '거룩한 경청'의 회복이다.

기고

광주전남 통합, 시민 역량과 민주적 결단으로



김삼호 전 광주 광산구청장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는 이제 초입기에 들어갔다. 2월 말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단체장이 선출되고, 7월에는 통합지자체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의 선거 전략으로 활용돼 왜곡된 갈등만 증폭될 위험이 있다. 선거기간 지역 사회의 현명한 대응 없이 민선 9기가 출범한다면 우려되는 혼란과 갈등은 시도 통합의 본래 목적 실현은 쉽지 않을 것이다.

광주·전남 통합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민주적 결단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도전이다. 광주와 전남은 오랜 기간 생활권, 산업권, 문화권에서 깊게 연결되어 왔지만 행정 경계는 협력을 가로막는 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제는 시민사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통합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며,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통합 논의는 단순히 찬반의 대립을 넘어 통합 이후 어떤 광주·전남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력과 실현 계획을 요구한다. 중앙정부가 길을 열었고 이제 공은 지역으로 넘어왔다. 더 이상 눈치만 보며 시간을 허비할 여유는 없다.

광주·전남 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행정, 학계 등이 망라된 거버넌스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거버넌스는 통합 과정에서 미뤄둔 갈등과 쟁점 사안을 전부 끄집어내고 이를 공론화하여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통합단체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거버넌스 체계가 쟁점들을 정리

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새로운 리더십에 전달하여 신속위 과정에서 중요한 방향을 정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거버넌스 운영 방안을 제안해 본다. 우선 거버넌스는 행정, 시민사회, 학계, 직능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하고 주관은 시도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적당하다 제안한다.

두 번째 목표로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쟁점들을 정리하고 합의 가능한 것은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핵심 쟁점은 정리된 형태로 남겨 새로운 리더십에 전달해야 한다. 운영방식은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된 쟁점과 합의 사항을 새로운 통합 시장 당선자에게 제출해 통합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역사적 도전입니다. 40여 년 민주화 운동의 중심으로서 광주·전남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주도 성장의 미래를 개척하는 선두 주자로서의 광주전남을 기대한다.

社說

윤석열 1심 선고...민심과 상식에 맞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어제 윤석열에 대한 재판에서 내란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은 내란죄 최소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은 아쉬운 판결이다.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적 모순이다.

이런 논리라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다. 친위 쿠데타의 성공률이 80%에 가깝다는 통계도 있는데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고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라니 과연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한 판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하지 여부인데 지귀연 재판부는 모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 사건의 핵심인데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군을 국회에 보낸 것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한 폭동이라고 결론지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을 설명하기 위해 영국찰스1세가 의회를 해산하려다 내란죄로 단두대에 선 역사적 선례까지 들었다.

지귀연 재판부의 1심 선고가 있던 어제는 세계정치학회 전·현직 회장들이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시민들의 노력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다. 30년 전인 1996년 8월 지귀연 재판부와 같은 법정에선 내란 우두머리인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불과 한달 전 이진관 재판부는 "아래로부터의 내란이 아닌 권력을 쥐고 있는 위로부터의 내란인 친위 쿠데타가 더 위험하다"며 한덕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양형과 관련해선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관여시켜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는데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정작 판결 때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과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들어 내란죄 최저 형량을 선고한 것은

윤석열의 내란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친위 쿠데타다. 법은 민심과 상식에 기반해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그렇지 못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법정 최고형으로 사법 정의를 세워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항소심을 맡게 될 내란전담재판부가 짐을 지게 됐다.

광주 자치구 정체성 반영해 명칭 변경 할 때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 자치구에 대한 명칭 변경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서·남·북·광산 등 방위 개념의 현재 명칭이 지역의 역사성과 미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정체성을 담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방위 개념의 명칭 변경은 필요해 보인다. 북구는 인공지능(AI)과 광산업, 광산구는 미래차, 남구는 에너지와 교육, 서구는 행정·금융 중심지라는 특색이 있어 이를 반영해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고민할 시점이다.

광주 시민사회와 5개 구정장들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계기로 주장하는 것이 더 이유 있는 요구다. 광주 자치구 명칭 변경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동구의 경우 총장급 김덕령의 시호를 딴 총장도와 같은 지역 정체성을 담은 유래 깊은 명칭이 있는 만큼 '총장구'나 하다 못해 '서석구' '무등구' 등의 대안이 있다는 것이다. 미래 가치를 담는다는 의미에서도 단순

통합 특별시 출범에 맞춰 5개 자치구를 독립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을 갖춘 일반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광주시의 직접 통제를 받는 자치구가 아니라 전남 시·군과 같이 어느 정도 자치권을 갖자는 것인데 명칭 변경과 함께 고려할 만한 내용이다. 차체에 10여 년째 답보상태인 광주 자치구 간 계계 조정도 논의하면 좋을 것이다.

無等鼓

영화 한 편이 역사를 다시 불러내는 순간이 있다. 단종의 비극을 웃음과 눈물로 풀어낸 영화 '왕과 사신'이 개봉 15일 만에 누적 관객 4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접하며 든 생각이다. 국내 사극 영화 최초로 1000만 관객을 기록한 '왕의 남자'보다 빠른 속도로는 흥행 기록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다가온다. 이같은 흥행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영화는 폐위된 어린 왕 단종이 유배지

연스럽게 장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영화를 보고 돌아오는 내내 마음에 남은 건 단종의 비극 자체보다 그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대한 생각이었다. 엄홍도와 마을 사람들,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단종 복위를 시도하다 목숨을 잃은 금성대군까지.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을 다시 찾아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얼마나 일부에 불과했는지 되돌아보게 됐다.

다시, 단종

인 영월 청령포에서 마을 사람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로 담고 있다. 비극적 소재이지만 영화는 예상보다 따뜻하고 유머를 잃지 않는다. 무겁게 다가오기보다 인물들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한다.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슬픔이어서 오히려 두 오래 마음에 남는다.

좋은 영화는 관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물렸던 이 름을 검색하게 하고 있던 사건을 다시 들춰보게 하며 결국 그 인물이 머물렀던 장소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인지 영월이라는 지명은 더 이상 먼 관광지가 아니라 어린 왕의 시간과 그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선택이 남아 있는 공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

흥행 분위기는 영화관을 넘어 실제 공간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종의 유배지였던 영월이 재조명되며 청령포와 관동현, 장릉을 잇는 동선이 '역사를 걷는 여행'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영화 속 장면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

영월은 끝났지만 단종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그 기억은 관객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그 여운이 영화를 넘어 역사를 다시 찾아보는 계기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보람 예향부 부장 bora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부 220-0697 (FAX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